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가정상비약시민연대 공동대표 진술서

Date : 2011-05-26 오후 4:36:38

진술서

진술인 :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대표 주민번호 : 주소 :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8월 말 경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가 의논할 게 있다고 전화를 해 와 의협을 방문, 조남현 이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남현 이사로부터 경만호 회장의 부탁이라며, 친 의료계 정치세력화 연구용역 사업의 형식상 계약자의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이후로 계속 친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 역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만호 회장이 사적 동기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호의 의심도 받기 싫어 이원보 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남현 이사는 경만호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네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원보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해도(연구용역 사업 계약자가 되어도) 좋은지 물었습니다. 이원보 감사는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원보 감사가 동의한 것입니다.

얼마 후 연구용역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11월25일 제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이원보 감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계 입금된 1억 원을 경만호 회장 계좌로 송금한 뒤 이 사실을 다시 이원보 감사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 2010년 3월경으로 짐작되지만, 이원보 감사가 저를 찾아와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느냐며 입출금 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입출금 내역을 USB에 담아 이원보 감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안이 문제로 적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원보 감사가 다른 감사들과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별도보고서에서 말입니다.

이원보 감사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매 과정에서 저한테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저한테 입출금 내역을 담은 USB까지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외부 회계사가 회계감사 중 발견한 것인 양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온갖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특히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의료와 사회 포럼'이 구설수에 올라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만호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계약해지 통고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 반환했습니다. 이상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0. 6. 진술인 : 박양동 (인)

=====

**No.150820 박양동 선생님의 진술서를 읽고 공개질의합니다.
내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세현](#)(kkksuwon) IP : 118.34.xxx

Date : 2011-05-31 오후 1:50:48 수정일: 2011-05-31 오후 1:54:36

선생님께서 과거 의쟁투 중앙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경만호 회장이 고문으로 있고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이고,

또한 경만호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던 동북아메디칼포럼을 산하단체로 거느리고 있는 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대표로서,

나름대로 의료계의 지도자로서의 말은 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

사실 대한의사협회 정관이나 감사업무규정, 재무업무규정 등 의협 제 규정에 의하면 연구용역 건과 관련하여 감사의 동의를 받았느냐의 여부는 행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만호 회장과 변호인은 다른 사건은 놓아둔 채

오로지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의 감사 사전동의 여부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나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흐리게 하여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또는 경만호 회장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감사의 사전 동의 여부, 특히 이원보 감사의 사전인지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이곳 플라자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지난 5월

27일의 재판과정과 그에 따른 관련 기사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요쟁점은 횡령 여부인데 마치 동의 여부가 횡령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것이 주요 쟁점으로 인식될 염려가 있어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은 지난 재판에서 선생님께서 특히 저를 특정하여 거론하셨으므로 사실확인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내용들,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이곳 플라자에 게시된 박양동 선생님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 6월 1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서를 보면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연구용역 계약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형식상의 계약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만호 회장의 의뢰와 사회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건과 관련하여 감사단과 대의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고 하고 또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원보 감사께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이원보 감사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1. 조남현 이사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처음 전화를 드린 시점은 대략 언제이며 당시 조남현 이사가 선생님께 이야기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업무협조가 필요하다였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허위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2. 지난 5월 27일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박양동 선생님에게 경만호 회장 변호인이 조남현 이사에 게 연락이 온 시점을 2009년 9월이라고 질의하였고 전화 후 1주일쯤 지난 뒤 조남현 이사가 선생님이 계신 창원으로 내려왔다고 질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질의하고 선생님께서는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선 제가 전해들은 변호사의 질의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아래 글에서는 의협에서 만난 것으로 적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입니까?

3.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적은 아래의 진술서에 의하면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8월경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하여 2009년 9월이라는 내용을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사전에 조남현 이사로부터 전화가 온 시점을 따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최초로 전화가 온 시점은 그렇다면 2009년 9월이 맞습니까?

4. 아래 진술서를 보면 경만호 회장이 감사단과 의장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조남현 이 사에게 들었다는 내용만 있는데 경만호 회장에게 직접 그 사실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5. 만일 4번의 질의에서 경만호 회장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즉 두리뭉실하게 금액을 따로 정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려 하는데 도와달라 였습니까? 아니면 허위 연구용역을 통해 1억원을 박양동 선생님 통장으로 보낼 터이니 그 돈을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의협을 위해 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까?

6. 박양동 선생님께서 이원보 감사께 전화를 4번 하였다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화는 대략 그 시점이 언제언제입니까?

7. 이원보감사께 전화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조남현 이사는 경만호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네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원보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해도(연구용역 사업 계약자가 되어도) 좋은지 물었습니다. 이원보 감사는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원보 감사가 동의한 것입니다.

7-1 이원보 감사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2 이원보 감사는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일 선생님 주장대로 이원보 감사께서 실제 연구용역이 아닌 허위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라는 말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자마자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송금할텐데 무슨 수입이 있고 지출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이원보 감사께서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는 말을 듣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7-3 “이원보 감사는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원보 감사가 동의한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동의했다는 주장입니까?

7-4 이원보 감사께서 수입과 지출내역 등 근거를 잘 남기라고 한 것은 박양동 선생님의 주장처럼 이원보 감사께서 경만호 회장에게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허위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내용을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사회포럼이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선생님의 진술서에 의하면 “그런데 대의원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안이 문제로 적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원보 감사가 다른 감사들과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별도보고서에서 말입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혹시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감사단이 감사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도장이나 싸인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번 제63차 감사보고서처럼 감사보고서가 둘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8-1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원보 감사가 다른 감사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별도보고서라는 말을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지난 제62차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감사단 4인이 동시에 싸인을 했던가요? 아니면 감사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어 이원보 감사의 보고서가 따로 있던가요?

8-2 또한 다른 감사들과 상의없이 감사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언제 들은 내용입니까?

9. 경만호 회장이 감사단과 대의원회 의장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말을 조남현 이사가 박양동 선생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주필 감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주필 감사는 2009년 11월 전후에 경만호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실에서 금액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비자금이 필요해서 비자금을 만들겠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양동 선생님의 주장처럼 조남현 이사가 감사단과 의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말한 부분과 시점상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박양동 선생님의 주장에 의하면 감사단과 의장이 동의하여 허위계약을 통해 1억원의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이 드러나 문제가 된 후에 경만호 회장은 1억원을 다시 송금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돈을 의협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허위계약이었다면서 굳이 연구용역기간을 연기한다거나 왜 다시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11. 의료와 사회포럼은 2009년 9월 12일 원격의료에 대해 서울대 암센터 이견희홀에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포럼개최 준비에 대해 박양동 선생님이 집행부 또는 경만호 회장으로 부터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한 의협측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12. 이상훈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2009년 8월 14일 밤에 경만호 회장 자택근처 압구정동 술집에서 만나 경만호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가서 이상훈 선생님과 같이 잠을 잤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때 만난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참석인원은 누구였고 당시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에 대해 경만호 회장으로 부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까?

13. 아래 진술서에 의하면

이원보 감사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 과정에서 저한테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양동 선생님이 “감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조남현 전 정책이사에게 들은 ‘경만호 회장이 감사단과 의장에게 얘기했다’는 말 뿐입니다. 조남현 이사는 사실과 다르게 박양동 선생님께 전달했거나 또는 박양동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국기 감사나 이원보 감사는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 박희두 대의원회의장의 주간동아 인터뷰 기사, 27페이지를 보면 당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1억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7일 재판에서 김주필 감사의 증언에 의하면 2009년 11월 경 감사 4인과 의장이 의협 7층 의장실에서 만나 논의하였는데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박양동 선생을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비자금이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남현 이사 또한 감사단과 의장, 회장이 모여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회의의 참석자가 아니므로 누군가 (회장 또는 사무총장 등) 에게 전해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조남현 이사에 감사단 동의사실을 전해준 인물은 2009년 6월 3일 집행부, 감사단 회의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연구비 1억원 용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맨 앞장에 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는 글이 있고 회의록 내용에는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박양동 선생님이 이원보 감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조남현 이사의 전언 뿐이므로 조남현 이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양동 선생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조남현 이사의 말을 믿었는데 조남현 이사는 누구에게 전해 들었으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남현 이사에게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

"시대 역행하는 복지부 정말 실망스러워"

박양동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대표 "반드시 약사법 개정돼야"

“보건복지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전국 대표자들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발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8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시민연대 박양동 공동대표(서울)[사진]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

그 동안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치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시민연대는 이번 복지부 발표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쉽다. 박양동 대표는 앞으로 시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반드시 국민건강과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대표는 “국민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 정부”라며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권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에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일반약 수퍼판매를 허용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며 복지부의 정반대 행보에 박 대표는 한탄스런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번 결과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번 일은 그 부분에 대해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있었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일반약 약국외판매 확정 방안도 복지부는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목 놓았다.

이번 상황을 그는 정치적 사정과 연계했다. 그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의 투표권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약사회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집단이고 집행부 결정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기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는 결코 국민들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가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기 위해 내세운 당번약국도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약사회가 제시한 대로 4~5천개 약국들이 당번약국을 시행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연 오랜기간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 근무 시간 대비 경제적 보전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얼마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약국 수익을 보전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나 국가적 보조없이 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음을 점쳤다.

덧붙여 각각의 약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주장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약사법 개정이다. 그는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야겠다고 판단하는 부모나 배가 아플 때 소

화제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정 내 상비약이지 응급실이나 약국이 아니"라며 "가정상비약 약국의 판매를 위해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대표는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내놓지 못하는 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이러한 국민불편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기사등록 : 2011-06-09 10:45

경만호 회장 4차공판 '1억 조성' 경위 초점

일부 감사 "포괄적 동의", 검찰 "절차성 위법" 對 변호인 "정총 의결"

지난 8일 열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4차 공판에서 의협 감사단은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지만 포괄적인 동의는 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주필, 허정, 김국기 감사 모두 피고인 경만호 회장으로 부터 활동금 1억원(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 계획을 들었으며 어떤 식으로든 동의는 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괄적 동의라는 구체적 개념은 감사마다 생각이 달랐다. 이는 검찰이 감사단이 자금 조성에 협조 했는지, 또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계좌에 송금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이 다음날 경만호 회장 개인계좌로 옮겨간 것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재차 물으면서 확인됐다.

김주필, 허정 감사는 포괄적 동의라는 용어를 동원해 일정 부문 경 회장의 자금조성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히 허정 감사는 이번 사안을 대통령 통치권에 비유했다. 적법성을 떠나 의료계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경 회장의 자금조성을 큰 틀에서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반면 김국기 감사는 액면 그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국기 감사는 특히 의협의 최고 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의협 정관에 위배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검찰은 자금 조성 계획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만큼 원천적으로 위법하다는 논리를, 변호인은 정총에서 주인을 받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감사단은 '62차 의협 정총'에서 제출·보고된 최종감사보고서 작성 과정과 타당성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허정 감사는 이원보 감사가 최종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감사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일방적으로 대의원에게 배포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최종감사보고서는 감사 4명의 최종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야 하는데 이원보 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국기 감사는 감사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었으나 의견조율 성격이며 감사단 협의는 거친 사안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다만 대의원을 상대로 보고서를 배포할 필요는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

보고서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계속 나오자 공판을 참관 중이던 이원보 감사는 허정 감사의 증언을 반박하며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다. 그는 감사단 모두 도장을 찍는 등 동의를 얻었으며 발송도 의협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인 김세현 회원도 판사에게 지난 2009년 9월에 이미 연구용역비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졌고 10월에 상임이사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 회장이 같은해 11월에 감사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의 5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경 회장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11-07-09 07:14

=====

경만호씨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외 회원 340명 고발 건

1.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2. 의료와 사회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혐의
3. 주식회사 엠케이헬스 연구비 2억원 횡령 혐의
4. 주식회사 월간조선 연구비 1억원 횡령 혐의
5. 전국 의사총연합 명예훼손(우편물) 혐의
6. 전국 의사총연합 명예훼손(인터넷) 혐의

대한의사협회 회원 김세현 외 1명 고발 건

7.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8. 의료정책 현안 자료수집 비용 등 현금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9. 판공비 횡령 혐의
10.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11. 참여이사 거마비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12. 휴무일 근무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13. 대한의학회장 기사 채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14.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웹사이트 메인화면 내 배너광고 업무상 배임 혐의

이상 총 14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 결과

검찰은 2,3,4,5,6,11,12,13 항목 등 총 8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무죄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고발인들은 항고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단체 만들어주겠다" 의협 법인카드 '핑핑'
김모 대학총장, 전의총에 의해 피고발...의협, "정치세력화 위해 추진"
권문수기자 kims@medipana.com 2011-02-17 12:00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기도 안성소재 D대학 김모 총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총장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의사협회 회원 163명의 서명도 포함됐다.

노 대표의 이번 검찰 고발은 경만호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한 14건 중 검찰이 김 총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김 총장에 대해 조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암수술 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경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6월 경만호 회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건립을 목적으로 의사협회의 법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0년 2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2,034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의사협회 자금으로 변제해 의사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노 대표는 "김 총장은 시민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마구 사용했다"며 "그러면서도 8개월동안 만들지도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추진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시민단체 건립을 추진했고, 해당 인사에게 급여 성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그는 "실제 사용한 월 평균 금액은 200만원 정도"라며 "사전에 감사단의 동의를 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의협 경만호 회장 횡령설, 사실아냐"
시민단체, "복지부 발언, 믿을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경만호 회장의 횡령설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횡령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설은 절차상의 문제이며 사실상 횡령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경만호 회장이 지난해 11월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원의 자금을 개인계좌에 가지고 있었던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의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외부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상대자와의 돈이 오가는 것은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그리고 복지부가 개인계좌 추적 문제에까지 관여해야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던 것"이라며 "의협 역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돈은 이미 반납해 정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경만호 회장의 횡령사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감사과정에서 해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아 이렇게 발언한 것 같다"며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일은 대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
"한의연 취직 모 총장 아들 감사선물에도 의협 법인카드 사용"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1/07/05 12:05 Posted by 이승우

고검, '재기수사명령'...경 회장 '법인카드' 사건 재수사 불가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경만호 회장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전용 ▲모 공과대학 총장에게 의협 법인카드 사용 허용 ▲경 회장 개인관련 소송비용을 의협 예산에서 사용 등 총 14건에 걸친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어 경만호 회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올 3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전용 등 8개의 혐의만 인정하고 '법인카드' 건과 '변호사 비용' 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환규 대표와 김세현 의협 대의원은 같은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법인카드' 건과 '변호사 비용' 건 등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노대표 등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에 '법인카드' 건과 '변호사 비용' 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항고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재기수사명령'은 고등검찰청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원처분 검찰청에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기소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 원처분 검찰청은 사건에 새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에 항고인인 노환규 대표와 김세현 대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노 대표는 “고등검찰청이 경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경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도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협 법인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인 모 공과대학 총장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수사 제대로 이뤄진다면 경 회장의 혐의 내용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또 “경 회장은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한 것이 의료계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모 총장이 아들이 한국한의학연구원 직원으로 취직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로 아들이 다니던 대학교수들에게 난을 선물한 비용도 문제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

노환규 대표, 의협 법인카드 사용한 김모 총장 고소
사기죄-공금횡령공범 등 혐의... "회장 출마의사 없다" 밝혀
권문수기자 kims@medipana.com 2011-02-11 12:00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과 관련 법인카드를 사용한 안성소재 김모 대학총장을 직접 고소키로 했다.

▲노환규 대표

노환규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김 총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의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배임혐의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김 총장을 직접 사기죄나 공금횡령공범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김 총장은 시민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마구 사용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면서도 8개월 동안 만들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만호 회장은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 대표는 차기 의사협회장으로 출마하거나, 전의총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장이 돼서 (현집행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 파헤쳐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협회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전의총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총 대표도 5월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권문수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taesazza>

기사작성시간 : 2011-02-11 12:00

=====

퇴진 요구에 '불편한 심기' 경만호 회장

8일 '회원과의 대화' 가져, 노환규 전의총대표, 의혹 집중 제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8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회원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대화'에서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사는 의협 집행부와 회원 간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일방적 발언과 고함, 반박에 이은 재반박 등 감정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먼저 한 개원의는 김해시의사회 퇴진 설문조사를 근거로 "신임투표를 진행

하고, 불신임이 나올 경우 퇴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은 "김해시의사회 설문조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며 다소 격앙된 어조로 답했다.

이어 경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경만호 회장은 간선제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집행부가 (판단할)몫은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담의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가정의학과 참여가 미진하다는 질문에는 "회무를 하면서 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 등에 참여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의원협회 설립에 대해 경 회장은 "집행부가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의원협회 설립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개원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 게시판 등을 통해 불거지는 의혹 등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참석자들의 요구도 나왔다.

이에 경 회장은 "유일하게 서울시 날씨가 바뀌어서 아침에 대화를 하게 됐다. 3시간 이상 맞짱토론을 할 생각이었다"며 "현재 전담의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깜짝 놀랐다"며 핵심을 비켜가기도 했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송우철 총무이사가 나서 해명했다. 송 이사는 "요양시설과 요양원은 지난 2007년에 결정된 사안이며 절차상 2년 안에 개설이 불가피했다"며 "1억원 논란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작년 6월에 4명의 감사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지원 역시 옳고 그름을 떠나 회장 당선 이후 시민단체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송 이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경 회장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노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찬성했으면서, 여론을 의식해 말을 바꿨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배임·횡령 의혹 밝혀지나?

2010.11.24 08:51

22일부터 사흘간 검찰 출두 대질신문...혐의 완강 부인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출두, 의사협회 공금 횡령 및 배임 고발건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지난 4월 2009년 대한의사협회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회계법인의 회계검토의견서가 외부로 노출되며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과 함께 모 언론매체 2군데에 연구비 명목으로 전달한 3억여 원의 횡령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또한 의협 법인카드를 모 대학 총장등에 제공, 공금 수천만 원을 누수하고, 휴일 근무수당, 대외업무비 등의 불분명한 사용에 대한 횡령 혐의도 함께 지적받았다.

이에 민초의사 341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경만호 회장을 연구용역비 등 공금 횡령과 배임, 회원기만,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경 회장은 그동안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1억원 연구용역비는 협회의 대외관계 개선 뿐 아니라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사전에 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안이고, 이와 관련, 지난 4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미 확인하고, 추인받았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것이 아니므로 결백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집행부 초기에 의료 제도개선을 위해 의사협회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단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회의 대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를 지원하게 됐으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이에 다른 비용을 법인카드로 하도록 한 것이고, 이 후 이 사용비용 및 직원 채용 임금은 모두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정당히 처리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질심문에서도 경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혐의점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 회장은 23일,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끝내고 비교적 수척해진 모습으로 검찰을 나서면서 “있는대로 열심히 잘 대답했다”면서 짝막한 소회를 남겼다. 즉,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회원들에 고수해 온 입장을 검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발인 신분으로 대질심문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경만호 회장이 공개적으로 회원들에 언급한 대로 소명하고 있지만 판공비 등을 비롯해 업무추진비를 비밀리에 쓰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무슨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경 회장이 지난 이틀간의 검찰조사에서 보다 명확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기로 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회장으로서는 이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 대표는 특히 “의협의 1년 회계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데, 이 중 일부를 회장이 비자금으로 썼어도, 회원들을 위해 무슨일이라도 했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썼으면서도 아무런 소귀의 성과물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고발조치의 첫 번째는 그의 무능이고, 두 번째가 마노요양병원과, 부천으로의 의협회관이전 추진 등 의혹”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단체의 수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두까지 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경 회장은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 회장은 지난 22일과 23일에는 법인카드를 통한 의협 판공비의 적정사용 여부, 휴일근무수당, 변호사비 사용 등에 대한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2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연구용역비 3억원 횡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질심문이 모두 끝나면 혐의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임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